

박제성 연구위원의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에 대한 토론문

100년의 꿈을 향한 연대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이다. 밖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모든 인간의 노동다운 노동(decent work)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지 한 세기가 되고, 안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최초의 기본법인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이 제정된 지 백주년이 되는 해다.

국제노동기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종종 겹쳤다. 인간 노동의 비상품성과 함께 사회정의가 세계평화의 기초임을 천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이 발표된 1944년 그 해(다섯 번째 개정),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개정한 임시헌장(열 개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대한민국 ‘인민’의 첫 번째 인권으로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파업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례적이다. 당시 파업을 보장하는 곳은 프랑스밖에 없었다.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던지고 있는데, 파업의 자유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들이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 국가가 경제성장과 다른 이유로서 함부로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임시정부에서 천명하였다. 세 번째로 언급한 ‘취직과 부양을 요구할 권리’는 지금 헌법의 근로의 권리(right to work)와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권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박제성 연구위원의 발제문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에 관한 필자의 토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right to social security)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시절인 1919년 최초의 임시헌법에서 이미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는 72년, 독립으로부터는 4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적 연대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28년이 지나도록 기본이 되는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못한 상황은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과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매우 정당하다.

사회정의를 향한 100년의 꿈이 헌법과 법률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래서 현실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박제성 박사는 신분 및 재벌체제로서 설명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 특히 남녀 청년들 사이의 현격한 인식 차이다. 채용에서의 공정성이나 경찰 수사에서의 남녀차별 등에 관한 논쟁은 아마도 제도적 공정성과 개인적 공정성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사회정의를 향한 공감대(social consensus)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사회통념이 모든 법적 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정의를 향한 공통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2012년 ‘노동에서 정상(Normality at Work)’이라는 글에서, 사회정의를 복무하는 시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인간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경쟁이나 성장이나 발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법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끝없는 탐욕이 판치는 ‘신종 레비아탄(nouveau Leviathan)’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이 돈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워 법 원칙들을 함부로 훼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실 현대 복지국가에서 필요한 시장이란 오직 사회 정의에 복속하는 시장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에 복무하는 시장’이 갖추어야 할 모습 중 하나로 공평한 취업 기회(취약계층에게는 먼저, 나머지에겐 평등하게 열린 취업의 문)를 든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회정의의 요소로서 사회연대를 추가하고자 한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향후 10년간 추구해야 할 각종 정책들이 모두 양보와 희생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층끼리 연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관할권을 상호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박제성 박사의 의견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일 삼국의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소득과 희망을 늘려야 하는 모순적 상황은 여러 계층의 협력과 함께 각 계층의 관할권의 존중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박제성 박사의 발표에 공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향한 연대는 국내의 다양한 계층 내에서 그리고 계층 사이에서도 요구되지만, 나아가서는 국제적 연대도 필수적이다. ILO의 창립 목적 중 하나도 결국 국제적 연대의 촉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 특수한 사정을 들어 보편적 노동권의 존중과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법 연구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사회정의와 국제노동기준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있다. **KLI**